문 대통령 "국회, 국난 극복 힘 모아야"

靑 수석보좌관 회의서… "정치권, 정부 여당과 함께 무한 책임
신종 바이러스와 세계대전 중… 3차 세계대전처럼 피해 혹독"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정치권을 향해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 정부와 함께 여당도 무한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모든 역량을 국난 극복에 집중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바이러스가 아니라 오직 국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얼마 안 남은 20대 국회의 마지막 소임도, 21대 국회를 준비하는 마음가짐도 국난 극복에 힘을 모으는 것이어야한다"며 "야당도 지혜와 역량으로 경쟁하면서 국난 극복에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야당의 의견에도 언제든지 귀를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국회 차원에서 초당적으로 협력해달라는 당부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날 오후부터 여야 원내대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논의를 시작한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코로나19 국난 극복 정신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이 있어야 내일이 있다"며 "첫째도, 둘째도 국난 극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경제를 살리고 나서야 다음이 있다"며 "이번 총선의 민의도 국난 극복에 다 함께 힘을 모으자는 뜻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인류는 지금 신종 바이러스와 세계대전을 치르고 있다"며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가져온 인명 피해와 경제 사회적 피해는 3차 세계대전이라 불러도 될 만큼 막심하고 혹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16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세계 각국에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고 있고, 세계 경제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침체로 빠져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이 전쟁의 최선두에 있다. 반드시 승리하여 희망을 만들어내겠다"며 "우리는 위기에 한 번도 지지 않은 국민이다. 이번에도 위기를 가장 빠르게 극복한 나라, 위기 속에서 오히려 기회를 만들고 새로운 희망을 먼저 열어나간 선도 국가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국난 극복에 전폭적으로 힘을 모아주신 국민의 뜻을 되새기며 국민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정부 입장은 지금 수정안을 낼 수는 없는 것"이라며 "70%(지급안)를 토대로 국회에 보냈고, 이제 국회에서 논의를 해봐야 하는 사안이다. 국회의 시간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 확대와 관련해서는 여야 간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뉴시스

정 총리 "국민이 코로나 영웅 일상 회복하도록 도와달라"

국회 시정연설… "코로나19와 싸움 끝나지 않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일부 제외… 양해·협조
코로나19 이후 지금부터 대비… 기회로 바꿔야"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웅이라며 이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국회가 신속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총리는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2020년도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에 즈음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코로나19와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대규모 집단감염은 종식됐지만 지역사회 소규모 집단감염과 해외 유입 감염 위험은 계속되고 있다"며 "감염력 높은 코로나19 특성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상황이 안정된다 하더라도 해외 유행이 계속되는 한 결코 안심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IMF(국제통화기금)는 세계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3.0%로 하향 조정해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를 겪을 것으로 전망했고, 우니라나 성장률은 마이너스 1.2%로 예측했다"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하향 조정폭이 가장 적으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저"라고 설명했다.

또 "실물경제 지표에도 코로나19 영향이 반영되기 시작했다. 매출 급감 분야 기업들은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매달 차입금 상환에도 근심이 커지고 있다"며 "자영업자들은 절박한 위기상황에 내몰리고 근로자들은 실직과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정 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재원 마련 방안 등을 설명하며 국회에 신속한 처리를 호소했다.

정 총리는 "현행 복지제도로는 광범위한 피해계층 지원에 한계가 있어 총 7조6000억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추경안을 편성했다"며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1478만 가구를 대상으로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영향으로 최근 소득이 급감한 가구에도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며 "지원 대상간 형평성, 한정된 재원 등을 고려해 일부 고소득층을 지급 대상에서 불가피하게 제외했다"며 양해와 협조를 구했다.

이와 함께 "추경안 재원은 금년도 예산 조정, 기금 재원 활용 등을 통해 전액 충당했다"며 "조정된 사업은 코로나19로 집행이 어렵게 됐거나 금리, 유가 등 경제지표 변화에 따라 절감 가능한 사업비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 대응해 시급히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즉각적인 집행이 가장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힘든 시기를 이겨내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추경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대비하겠다"며 "위기 속에서 국민들의 저력이 더욱 빛을 발휘하고 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하는 데 정부부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인, 구급대원, 방역대원과 착한 임대료, 헌혈 챌린지, 릴레이 기부, 철저한 자가격리에 앞장서고 계신 국민들이 영웅이다"라며 "이들이 위축되지 않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님들께서 도와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국무회의를 열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7조6000억원 규모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뉴시스

'코로나19 고통 분담'
민주, 의원 세비 모아 기부

더불어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세비 6억8233만원을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20일 소속 의원 91명이 참여해 2개월간의 세비(1인당 374만원)를 모아 6억8233만9000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지난달 25일 의원들의 자율적 참여로 세비 환원을 결정했다"며 "코로나19 위기 대응 및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난달 "국회의원 세비 50% 기부운동 등을 비롯해 최선을 다해 코로나19 국난위기 극복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유인태 국회사무총장도 2개월간 각각 세비와 급여 반납에 동참했다.

/뉴시스

이해찬 "다시 오지 않을 기회… 우리가 잘 하자"

민주, 내달 7일 '21대 국회 주도' 새 원내대표 선출
이인영 "총선 후 신발끈 풀 상황 아냐… 민생 비상"
험지 등서 분투 끝 낙선한 의원 위로 이어져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의원총회를 열고 내달 7일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하는 등 제21대 국회 운영을 위한 채비에 들어갔다.

아울러 총선에서 180석 압승을 거둔 데 반색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엄중한 민생경제 상황 대응에 초점을 맞추며 표정관리를 하는 모양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사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비공개 모두발언에서 "이만한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해야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몇몇 의원들이 발언을 했다. 이럴 때 잘 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영남쪽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추경 내용을 설명하면서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대상 확대와 관련해 "전국민에 지급하는 것은 총선 기간 동안 여야 공히 하자고 했던 것"이라며 "재난지원금 성격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주는 게 맞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원내대변인은 전국민 확대와 관련해 당 입장 변화가 없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앞서 이인영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주중에 원내대표 경선준비에 착수하겠다"며 "경선 관리 위원을 맡아줄 분을 찾는대로 곧바로 착수해서 지금 예정으로는 5월7일에 다음 원내대표 선거를 통해 선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내가 아주 원만하게 원내대표에서 물러날 수 있도록 이번 마지막 국회까지 잘 협조해주길 당부한다"며 "지난 총선 과정에서 애써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선거는 끝났지만 우리가 신발끈을 풀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 말그대로 비상상황이다. 국민의 생계가 위협받는 비상신호가 연이어 터지고 있다"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제출돼있다. 이제 국회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무총리 시정연설이 끝나면 곧바로 여야 원내대표끼리 만나서 (추경) 의사일정과 처리방향 등을 협의할 예정"이라며 "신속한 처리가 생명인 만큼 매우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달 중으로 본회의를 열어서 추경을 처리하고 5월 중에 우리 국민들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볼 생각"이라고 했다.

총선 후 처음으로 열린 이날 의총에선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서로 "수고했다" "잘했다"고 당선을 축하하는 등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박경미, 김해영 의원 등 '험지' 강남 및 영남에서 분투끝에 낙선한 의원들에게는 위로가 이어졌다.

/뉴시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다당제 꿈 좌초
자연인으로 돌아간다"

정동영, 정계 은퇴 뜻

21대 총선에서 고배를 마신 민생당 정동영 의원이 20일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간다"며 정계 은퇴 의사를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동안의 성원과 사랑에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적었다.

정 의원은 "4년 전 이맘때부터 다당제의 꿈, 한국 정치의 새로운 길을 만들고 싶었다"며 "하지만 저의 힘과 능력의 부족으로 좌초했다.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했다.

이어 "저는 '빚진 자'다. 무한한 사랑과 성원에 힘입어 여기까지 왔다"며 "그 빚을 갚고자 마지막 봉사의 기회를 허락해주십사 부탁드렸으나 실패했다"고 썼다.

그러면서 "큰 사랑에 보답하지 못해 가슴 아프고 송구스럽다"고 했다.

민주평화당 대표를 지낸 4선의 정 의원은 제21대 총선에서 전주병에 민생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득표율 32.0%(5만22표)를 기록하며 66.6%를 기록한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당선인(10만4039표)에게 더블스코어로 졌다.

/뉴시스

국회, 23일 행안위 열고
2차 추경안 상정키로

여야는 오는 23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한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행안위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7조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2차 추경안에는 세출사업을 3조6000억원 삭감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지출을 2조8000억원 축소해 총 6조4000억원 규모의 지출 조정 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주택도시기금, 농지관리기금 등 기금 재원을 활용해 1조2000억원을 조달했다.

민주당은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확대를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하위 소득 70% 4인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추경안 처리 시점은 아직 미지수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규모와 추가적인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해 미래통합당과 합의하는 과정이 남아있다는 점도 변수다.

민주당은 늦어도 4월 안에는 추경 심사를 마치고 5월 중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뉴시스

이용호, 선거기간 신고
고발 일제 취하

지난 15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남원임실 순창 지역구에서 당선된 이용호 의원이 치열한 선거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법적으로 제기했던 문제를 모두 취하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화합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자신을 폭행한 건을 비롯해 선관위 신고, 사법기관 고발 등 일체를 취하하는 등을 통해 갈등과 반목을 해소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지역 발전을 이루라는 것이 지역민들의 명령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의정활동에 있어 지역민들의 뜻을 받들어 지역발전과 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약속을 지키며 초심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